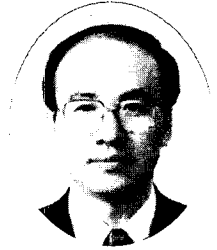


# 「에코-2 프로젝트」 추진현황



이 규 용  
환경부 환경정책국장

## 1. 「에코-2 프로젝트」 추진배경

우리는 흔히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환경의 훼손과 악화가 불가피하고,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경제의 위축이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은 그동안 상당기간 일반인들은 물론 정책담당자들도 익숙해져 있어 거의 고정관념으로 굳어지다시피 하였다.

그리하여 환경보전을 주장하는 사람들중 일부는 경제발전에 저해되는 것쯤은 당연할 일로 여겨 일방적인 보전을 주장하는가 하면, 경제발전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도 경제활동에 따른 환경의 침해를 불가피한 것으로 묵과하는 예를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사실 환경보전을 도외시한 개발이나 경제발전은 위험하거나 때로는 무의미하며, 경제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환경보전 또한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렵다.

이처럼 '환경'과 '경제'를 서로 대립적이고 상충적인 것으로 관계지을 때 거기서는 분열과 대치의 생산적이지 못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 이제는 종래 상충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온 '환경'과 '경제'의 관계가 조화롭고 상생적인 관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환경을 배려한 개발과 경제발전 모델이 제시되고, 환경규제나 환경보전에도 경제적인 요인에 대한 고려를 수반하는 분별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환경'은 그 자체가 새로운 산업의 영역이자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근원으로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환경부에서는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리기 위한 「에코-2 프로젝트」를 올해의 역점사업으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에코-2 프로젝트」란 환경을 뜻하는 ecology와 경제의 economy에서 머릿글자인 두 개의 eco를 따서 명명한 것으로,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에코-2 프로젝트」 추진내용

「에코-2 프로젝트」의 주요 추진내용은 환경산업 육성과 환경기술 진흥, 자원절약과 폐기물 재활용, 물질약과 절수산업·시장 창출, 환경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그리고 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정책 추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로 요약할 수 있다.

### 가. 환경산업 진흥으로 성장동력 확충

전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환경산업(ET)이 정보산업(IT), 생명산업(BT)과 함께 21세기 유망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발달과 산업생산활동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환경문제의 대두와 쾌적한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와 욕구의 증대,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규제의 강화와 무역과 환경의 연계강화 등에 기인하여 대내·외적으로 환경산업의 시장규모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시장은 '98년 4,843억불에서 2005년 6,940억불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EBJ 추계, 연평균 증가율 6%)되고, 국내 환경시장도 '98년 7조3천억원에서 2005년 18조6천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국은행 추계, 연평균 증가율 15%)되고 있다. 또한 동남아 등 개발도상국의 환경시장도 연간 10 - 15%의 높은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선진국들의 선점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환경산업은 성장잠재력이 매우 크고 또한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의 유망산업으로 볼 수 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에코-2 프로젝트」를 기치로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시대적 조류에 맞추어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국내적인 환경질의 개선은 물론, 나아가 국가의 성장동력 확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추진중인 환경산업 육성정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03년까지 환경산업의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2010년까지 환경산업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난 1월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산업 발전전략(2001-2003)」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일이다. 동 전략은 5개분야 58개 과제로 구성되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기술력과 경쟁력이 우수한 유망 환경벤처기업의 창업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창업투자사 등을 통하여 130억원 규모의 환경벤처 전용펀드를 조성하여 운영중이며, 환경신기술 창업보육센터를 설립하여 유망한 기술을 지닌 예비 기업인들의 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국내 환경시장의 수요창출을 위해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별 환경관리기준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환경기초시설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다.

넷째, 환경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한·중·일 국제 환경산업 라운드데이블을 지난 6월 서울에서 개최하였고, 환경기술과 산업의 대 중국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하여 북경에 「한국 환경산

업상설전시관」을 7월초 개관하였으며, 민관 공동으로 「환경산업 수출협력단」을 구성하여 중국, 동남아 등 수출유망국가에 파견하여 홍보 및 수출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산업의 토대가 될 첨단 환경기술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진흥사업의 일환으로 금년에 5백억원 등 향후 10년간 총 1조원을 투입하여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사업 (Eco-Technopia 21)」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기술평가제도」와 「성공불제」를 통한 우수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지역별로 특성화된 환경기술개발을 위하여 지역의 산·학·연·관의 역량을 결집하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금년중 14개소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나. 자원절약 및 폐기물재활용 촉진

폐기물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폐기물이 환경에 주는 부하를 줄임으로써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모든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보다는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에 기초한 자원순환형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할 자원인 환경의 잠재력을 최대한 보전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폐기물처리구조를 살펴보면 재활용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91년에는 생활폐기물중 7.9%만을 재활용하였으나, '99년에는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재활용 촉진정책에 힘입어 재활용율이 38.1%로 증가하는 등 폐기물처리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21세기에는 환경적 토대가 건실한 국가만이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누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이 폐기물관리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폐가전제품 등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정부와 기업 간 자발적 협약에 의하여 가전제품, 형광등, 유리병, 금속캔 등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하여(현재 근거법률인 「자원의절약과재

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계류중) 의무화 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폐가전제품 처리능력도 2000년 28만 대 수준에서 2001년 76만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재활용산업 육성지원을 위하여 재활용기술 개발을 위한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 (127억원)하고 재활용시설 자금지원을 확대 (600억원)하는 한편, 시·군·구의 집하선별장을 현대화(17개소)하고 농촌폐기물자원화시설을 확충 (66억원)하고 있다.

셋째, 수도권매립지에 매립가스를 이용한 발전시설(50MW급)을 착공하여 매립가스를 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목표연도인 2004년에 동 시설이 완공되면, 연간 200억원의 에너지 대체효과를 가져오고 더불어 악취감소와 매립지안정화 등의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다. 수요관리중심의 용수관리체제로 절수기술·시장창출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1,274mm)은 세계 평균(973mm)의 1.3배에 이르지만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연간 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의 12.5%에 불과하여 수자원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보면 현 추세가 유지될 경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연간 4억톤, 2011년부터는 연간 20억톤의 물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물부족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물 급수량은 1인당 1일 388ℓ (1999년 기준)로 선진국(일본 357ℓ, 영국 323ℓ, 프랑스 281ℓ)에 비해 매우 높아 부족한 물 자원의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러한 물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연도별 물질약 목표를 설정하고 수도사업자(지자체, 수자원공사)와 공공기관의 물수요관리목표제를 의무화하여 이행실적을 평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같은 물수요관리체제 정착을 통하여 2001년 중 용수생산량의 5.2%에 해당하는 3억톤(1,600억 원 상당)을 절약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가정의 절수기 보급률을 금년중 31%, 2004년까지 70%로 올리고, 금년중 초·중·고등학교 10,228개소에 절수기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연면적 6만㎡ 이상의 신축건물 중 대형호텔·백화점·업무용빌딩·공장 등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하수처리장의 신·증설시 처리수의 재이용시설 설치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물질약을 촉진하기 위한 “절수형 수도요금제”를 강화하고 물질약 투자대행업(WASCO)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라. 환경지식·정보인프라 확충 및 기업의 환경경영 촉진

근래에 이르러 기후변화협약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210여개의 국제환경협약이 체결되면서 국제정치와 무역질서가 환경을 중심으로 급격한 재편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자국의 환경기준을 강화하거나 생산자에게 폐기물회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방적으로 무역규제조치를 강화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기업의 이윤극대화라는 협의적 사회책임론에서 지역 환경문제해결의 광의적 사회책임론이 대두되고 있고, 소비활동 또한 물질적 풍요나 편리성만을 추구하는 행태에서 사회생태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녹색소비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밖에도 환경친화적 기업경영이 기업의 가치창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의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금융기관의 요구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국내외적인 인식과 여건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또한, 환경문제를 둘러싼 정부, 기업, 사회간의 유기적인 연계와 효과적인 환경정책 수단확보를 위하여는 각계 상호간의 정보교류와 협력,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환경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 기업, 소비자, 민간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환경지식·정보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을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현재 「에코-2 프로젝트」의 추진을 위하여 각 계의 전문가 70여명으로 구성된 「에코-2 포럼」과 “환경경제팀”, “환경경영팀”, “환경기술팀”, “환경산업팀”, “자원재활용팀”, “에코상하수도팀” 등 6개 분야별 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둘째, 원료와 에너지 등 자원의 투입은 최소화하고 생산성과 환경적 건전성은 최대화하는 기술혁신 사례 개발·전파를 위한 가칭 “More from Less” 혁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환경친화기업지정운영 활성화, 환경성적표지제도 및 그린빌딩인증제도 도입, 지역별 환경건설팀 사업추진, 기업환경성과평가기준 마련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인 기업경영을 유도하고,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금융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해 나갈 방침이다.

## 마. 환경·경제 통합지표 개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실현을 위하여는 경제와 환경보전활동을 조율 내지는 통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 도입이 요구된다. 환경문제는 대부분 생산과 소비활동 등 경제활동 결과에 기인하기 때문에 환경의 정책방향도 경제활동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로 보여진다.

환경투자나 환경규제 등의 환경정책 또한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추진되고 폐수종말처리장 등과 같은 환경인프라에 대한 투자 역시 에너지절감차원의 자본적 투자라는 「환경투자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부에서는 앞으로 환경요인을 반영하여 국민총생산을 산출하는 녹색GDP를 단계적으로 도입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환경투자의 효율성 증진

지표로 활용하고, 환경투자나 환경규제 등 환경정책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와 도입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투자의 방향을 종전의 사후처리투자 중심에서 사전예방투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녹색 GDP 및 환경정책의 사전경제성분석제도 등과 같은 환경경제통합분석 수단을 통해 도출될 각종 지표를 국가 주요 정책에 반영하여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고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진력해 나갈 계획이다.

## 3. 맺는말

환경과 경제는 이제 더 이상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고 또 그러해야 한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환경산업을 발전시켜 경제와 환경을 모두 살리는 윈-윈(win-win)전략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

우리부에서는 “환경”과 “경제”의 상생적 패러다임에 기초한 「에코-2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므로써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다. **環境保全**

## <필자약력>

- '78. 8 : 서울대 법학과
- '85. 8 : 서울대 행정대학원(수료)
- '77. 12. ~ '88. 5 : 행시 21회, 법제처 제1국, 2국
- '88. 5 ~ '90. 3 : 청와대 정책보좌관실 행정관
- '90. 3 ~ '97. 3 : 환경부 폐수관리과장, 평가제도과장, 장관비서관, 교통공해과장, 수도권정책과장, 폐기물정책과장, 기획예산담당관
- '97. 4 ~ '98. 1 : 환경부 공보관
- '98. 1 ~ '99. 1 : 중앙공무원교육원 파견
- '99. 1 ~ '00. 7 : 대기보전국장
- '00. 7 ~ '01. 3 : 수질보전국장
- '01. 3 ~ 현재 : 환경정책국장